

2019년 법률서비스업 근로감독(수시) 결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

1 감독 배경

- 서울고용노동청 관내에 법률서비스업 사업장*이 다수 소재해 있으나, 장기간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노동관리의 취약 가능성
* 본청 관내 1,300개소(5인 이상): 노무사 21, 법무사 161, 변리사 74, 변호사 644, 세무사 328, 회계사 70, 행정사 2
- 동 업종의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
* 신고사건 추이: '16: 174건(40개소) → '17: 167건(50개소) → '18: 140건(51개소) → '19.8월: 178건(55개소)
- 사업장의 준법의식 제고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독 실시

2 감독 개요

- (실시기간): '19. 9. 16.(월)~11. 15.(금)
- (감독대상): 법률서비스업 중 22개소
* 변호사 8개소, 법무사 4개소, 세무사 4개소, 노무사 2개소, 변리사 2개소, 회계사 2개소
- (감독내용)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하되 금품 채불, 장시간 근로, 최저임금,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

3 감독 결과

- 감독실시 사업장 22개소 중 21개소에서 금품채불 등 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 확인
- 시정완료 84건, 시정 중 6건, 과태료 5건(980만원), 사법처리 1건*
* 자금 사정으로 시정지시(퇴직금 지급)에 불응

- 위반 내용으로는 금품채불 34건,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18건, 취업규칙 신고위반 등 16건,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0건, 기간제 근로자 차별 1건,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근감법 위반 9건, 기타 8건

< 위반 내용별 현황 >

(단위: 개소, 건, 천원, 명)

구분	개	금품채불	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	취업규칙 신고위반 등	근로시간 위반	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	비정규직 차별	근감법*	기타**
위반 건수	96	34	18	16	-	10	1	9	8
금액 (만원)	-	279,430 (295)	- (250명)	-	-	- (51)	839 (1)	-	-
위반 사업장수	21	16	15	16	-	10	1	6	6

* 근감법: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 개최, 고용처리위원 미선임 등

** 기 타: 근로자명부 미작성, 계약서류 미보존, 최저임금 미게시 등

2. 분야별 위반사항

1 금품채불

- 22개소 중 16개소에서 34건 확인(295명, 279,430천원)

< 금품채불 세부내역 >

(단위: 개소, 천원, 명)

구분	개	임금 미지급	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	연차수당 미지급	최저임금 미달	퇴직금 미지급
위반 업체수	16	3	9	7	8	7
금액 (만원)	279,430 (295)	8,221 (9)	24,050 (80)	33,900 (56)	174,637 (137)	38,622 (13)

- (임금) 3개소에서 8,221천원(9명)의 임금채불 확인
- (시간외수당) 9개소에서 연장·야간·휴일 등 시간외근로수당 24,050천원(80명) 확인
- (연차수당) 7개소에서 연장수당 미지급 33,900천원(56명) 확인
- (최저임금) 8개소에서 최저임금 미달 174,637천원(137명) 확인
- (퇴직금) 7개소에서 퇴직금 미지급 38,622천원(13명) 확인

2]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(근기법 제17조, 기간제법 제17조)

○ 22개소 중 15개소에서 18건 확인(피해근로자수 250명, 과태료 5건 980만원)

3] 취업규칙 위반(근기법 제93조*, 제96조**)

○ 22개소 중 16개소에서 16건 확인

* 취업규칙 미신고(또는 변경 미신고)

** 취업규칙의 일부 내용이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어긋남(미탈)

4] 비정규직 차별

○ 22개소 중 1개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차별* 확인(1명, 식대 838,710원 미지급)

*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식대를 지급하나,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(특허관련 사무직)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식대 미지급

5] 기 타

○ 성희롱예방교육 미 실시 등 고령법 위반(10개소),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 등 근참법 위반(6개소), 근로자명부 미작성 및 계약서류 미보존 등(6개소)

4 조치 사항

○ 감독 실시사업장 22개소 중 21개소에서 96건의 범위반 사항을 확인

- 시정지시: 91건 → 시정완료 84건, 시정 중 6건, 사법처리 1건

- 과태료부과: 5건(980만원)